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미국 통화정책, '94년 성장에 역점

美國은 내년에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펴 나아갈 전망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최근 미국의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데 역점을 둔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FOMC는 그간 경기회복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정책을 펴 왔으나 앞으로 1~2년간은 물가불안의 우려가 별로 없는데다 경기회복세가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결정 방향을 전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미노동부가 발표한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당초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 수준을 밑돌아 국제유가가 폭락한 86년을 제외할 경우 지난 6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로두스 리치몬드 연준은행총재 등 FOMC의 일부위원들은 8월중 물가상승폭 등을 내세워 통화긴축완화에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졸단 클리브랜드연준은행총재 등의 경우 연간 총통화증가율(M2)목표치를 현 2.5%에서 6.5%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北美에 자유무역협정 열기 고조

북미자유무역협정(NAFATA) 때문에 북미

대륙이 들끓고 있다.

내년 1월을 협정발효시기로 잡은 클린턴 행정부가 처의회 및 국민설득작업을 본격 시작하면서 미국전역이舌戰場으로 바뀌어 버렸고 멕시코의 경우 경제문제 차원을 넘어 정치적 사활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4일 예정대로 포드, 카터, 부시 등 3명의 전임대통령을 대동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협정안에 서명해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캠페인의 시작신호를 올렸고 미의회에서는 미키 켄터 무역대표부 대표 등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참석, 의회와의 공방전을 벌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미국인을 설득하기 위해 협정이 발효되면 멕시코의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오히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물론 처멕시코 수출증가로 2년내에 20만, 10년내 100만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정발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켄터 대표는 하원 예산위에서 수주내에 멕시코측과 관세인하 협상을 개시, 미국의 주요 제품에 대한 멕시코측의 수입관세를 일정기간 내에 대폭 인하토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한데 이어 멕시코측과 공동으로 80억달러의 국경지역환경보호기금을 조성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협정발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하원의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을 달

했다.

이같은 행정부의 움직임에 미국의 관련기업들이 동참, 멕시코는 예상보다 실질임금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낮은 생산성, 교통난, 사회간접시설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그리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니라면서 로스 페로 前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한 실직우려론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타바스코소스 생산업체인 맥일헤니社, 전자업체인 톰슨社, 사무가구메이커인 하위스社 등 상당수 멕시코 투자진출기업들이 멕시코내 공장을 철수하거나 신규투자지역을 미국으로 옮길 것으로 보여 협정발효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3. 미국, 中國에 시장개방 확대 촉구

美國과 中國은 15일 北京에서 양국간 무역 회담을 열고 中國의 시장개방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리 산즈 美무역대표부 中國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케알니 상무부 부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미국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미국기업에 대한 中國시장개방 내용의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양국대표단은 미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개방문제와 지적재산권보호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대사관측이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中國측이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수백종에 달하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비공개적인 내부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고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합의문 발효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찰린 바르쉐프스키 美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지난 6월 의회에서 中國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보호무역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

다고 증언,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측은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서비스산업에 대해 中國측이 실험적으로 몇몇 기업에만 시장을 개방했을 뿐 완전히 폐쇄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4. 일본, 輸入확대 종합對策 마련

일본정부는 각기업과 국민에 대폭적인 수입확대를 호소하기 위한 '輸入擴大基本計劃'을 마련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기본계획엔 제품수입의 촉진, 대일투자의 확대, 정부규제의 완화, 내수확대의 필요성 등 수입확대 및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여러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달말 열리는 美·日 頂上會談에서 호소카와(細川)수상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이달부터 본격화할 미·일간 경제문제협의를 앞두고 일본정부의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노력을 美側에 내보임으로써 미국측의 대일비판을 누구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과거에 수입확대 대책으로 나가 소네 전수상이 전국민에 외국제품의 구입을 호소하는 한편 85년 7월에는 '수입촉진 실천 프로그램'으로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수입확대를 겨냥한 종합적인 정책을 망라한 지침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통산성 등이 중심이 되어 기본계획안을 작성중인데 10월 7일 주요 경제각료 및 경제계 대표가 참석하는 무역회의에서 호소카와수상이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제품수입확대외에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참여확대, 정부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내수확대 등을 골간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제품수입 확대항목에는 주택·자동차 등 생활관련 소비재의 수입촉진, 일본무역회의 수입촉진사업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5. 4MDRAM對美輸出價 인상추진

일본의 NEC는 미국의 유럽 수요처와의 사이에 4MDRAM의 10~12월 수출분에 대해 가격인상 협상에 들어갔다. 가격인상은 급격한 엔高와 달러약세로 4M의 채산이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급품·多비트품은 모두 개당 평균 1달러 정도, 저전압품은 3달러 정도 각각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4M은 품귀상태에서 가격협상은 NEC가 요구한 인상폭으로 9월 하순께 합의에 달할 전망이다.

4MDRAM은 92년 가을이래 미국의 퍼스널 컴퓨터 경기에 힘입어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 일본의 유력 반도체메이커들은 단계적으로 증산하고 있으나 유통단계의 품귀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3월경까지 4M의 품귀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업계내에선 최근 94년하반기에도 수급이 빠듯한 상태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론 엔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력 메이커들은 대량 수요처와의 사이에 4M 등 수출품의 채산악화분에 대해 가격인상을 협의하고 있다. NEC에 따르면 이번 가격인상 협상은 미국에 대한 4MDRAM 10~12월 출하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급품은 현재의 약 12달러에서 약 13달러로, 多비트품은 역시 약 14달러에서 15달러로, 저전압품(3.3볼트)은 약 17달러에서 약 20달러로 각각 인상키로 협상에 들어갔다.

NEC에 따르면 업계전체의 4MDRAM 총족률은 현재 보급품의 경우 약80%, 多비트품은 약 60%, 저전압품은 40% 정도인 것으로 보

인다.

일본의 반도체메이커들은 엔高로 수출채산이 한계에 달해 있어 이번 NEC의 움직임에 계기로 가격인상 협상을 표면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6. EC, 換率시스템 수정·보완키로

EC역내 12개국 재무장관들이 곧 회합을 갖고 지난 8월초 깨진 통화시장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필립 메이스타트 벨기에 재무장관은 EC환율메카니즘(ERM)의 수정보완을 위해 의장국으로서 역내의 다른 재무책임자들에게 회담개최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8월 2일 14년간 소폭 변동폭만을 인정해 온 EC통화시스템(EMS)을 중지시키고 대신 새로운 내용의 통화체계를 도입키로 한 재무장관회담 이후 처음 열리게 되는 것이다.

EC재무장관들은 이미 2.25% 또는 6%의 환율변동폭을 포기하고 중심환율에서의 상하변동폭을 15%까지 가능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 조치는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및 다른 역내국가들이 자국통화의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졌다.

이 조치로 독일 마르크와 네델란드의 길더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내 통화가치는 떨어져 ERM으로의 복귀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영국투자회사의 한사람인 스테판 킹씨는 "아무도 타이트한 환율변동만을 규정하고 있는 ERM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7. 東歐에 外國人투자 활발

지난 수년사이 동구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드레스드너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89년 동구권개방 이후 동구권으로 흘러들어간 외국인 투자는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는 헝가리로 전체 동구권 외국인투자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억달러를 끌어들었다.

헝가리 다음은 체코로 약30억달러를 유치, 헝가리의 경쟁상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8,000만달러의 유치실적을 올려 이들 3개국중 가장 저조했으나 앞으로 경제성장이 가장 유력시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루마니아가 6,000만달러, 러시아가 3,000만달러, 슬로바키아가 2,800만달러, 불가리아가 2,6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는 독일과 미국으로 독일기업들은 특히 체코에 투자를 집중한 반면 기타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난 91년 이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기업의 경우엔 다소 늦게 투자에 참여했지만 대형프로젝트를 선호해 동구지역에 대한 자본유입량으로 보면 지난해 이후 동구권에 대한 최대의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외국기업들이 동구권투자를 선호하는 동기로는 무엇보다도 낮은 임금과 양질의 교육수준이 꼽히고 있고 업종별로는 섬유, 기계제조업, 금속가공 또는 교통업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동구권국가들은 금융부문, 화학산업, 중공업 등 국가적으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제한하고 있고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심해 헝가리, 폴란드 등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직접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드

러났다.

8. 中國, 통신시장 통제강화

지난 13일 중국정부가 공적으로 운영되는 통신사업의 승인 및 행정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통신시장이 정부의 보다 엄격한 통제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이 규제법안은 공공관리범주에 해당하는 무선호출수신기, 800Mhz 프로그램 통제형 전화, 450Mhz 이동통신, 국내 VSAT(초소구경 터미널)통신장비 및 기타 관련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국가의 승인증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화정보서비스, 컴퓨터정보서비스, 전자우편(E-MAIL)서비스, 전자정보교환(EDI)서비스, 비디오텍스, 기타 통신사업은 지방통신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제법안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 해외기관이나 개인이 통신사업에 투자를 벌이거나 관리 혹은 참여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 산안 郵電部 대변인은 해외투자자나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통신장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 대변인은 최근 몇년동안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국가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급증추세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郵電部는 통신산업의 일부를 점차적으로 개방했고 국영 네트워크의 추가적인 능력확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했다.

그러나 수 대변인은 통신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혼돈스러운 상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일부 통신기업은 행정당국의 심사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통신사업에 나서 정상적인 통신질서를 문란시켰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일부기업들은 해외 기

업과 손을 잡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과거 몇년동안 중국의 통신산업은 급격한 속도로 발달됐다. 금년 1월부터 8월사이 중국의 전화가입자수는 351만명이 늘어났다. 현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무선호출송신국 가입자수는 거의 5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동전화 소유자수도 40만을 넘어서고 있다.

9. 中전자교환기 市場 경쟁격화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전자교환기시장이 각국 메이커들의 각축 무대가 되고 있다.

NEC天津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전자교환메이커 대부분이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프랑스·벨기에·독일·캐나다·스웨덴·스페인·일본의 유력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미 1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받아 놓고 있다. 금년 이들 메이커의 수주액은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본의 일본전기(NEC)가 천진에 합작으로 설립한 NEC天津의 한 관계자는 각국기업의 경쟁에 대해 '매우 치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최대의 잠재력을 가진 전자교환기시장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81년 이래 이미 3,000만회선분의 전자교환기를 도입했으며 90년부터 95년까지 다시 40억달러 상당의 전자교환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우편 및 전신부문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전화보급률은 2천년까지 10%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금부터 전화 보급률을 매년 1포인트씩 높이고 모두 1천만회선의 전자교환기를 도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국의 일부 메이커들은 중국시장을 개척하

기 위해 몇년전부터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해 놓고 있다. 미국의 벨社は 84년 상해에 전자교환기를 생산하는 중국 최초의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이어 독일의 지멘스社가 북경, 일본의 NEC가 천진, 미국의 AT&T가 청도와 성도, 캐나다의 NT社의 광동의 順德에 각각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이들 기업의 설계생산능력은 연간 100만회선 이상에 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이래 통신사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금년 전화보급률은 3%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금부족은 중국 각지의 통신사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다국적기업은 정부차관 또는 바이어즈 크레디트를 중국시장 진출 수단으로 삼고 있다.

10. 中, 정보산업개발목표 설정

중국은 오는 2천년까지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정보시스템을 설립, 거시적·미시적 경제통제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목표는 지난 6일 북경에서 개최된 한 심포지움에서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타 관련부처 관리들에 의해 제안됐다.

여기에는 ▲ 정부관련부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적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기업들에게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 시장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 정보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 다수의 대형 정보서비스 기업을 설립하고 ▲ 인력연수에 효과적인 방법을 실행하는 등 6개항의 중점사안이 포함돼 있다.